

1991년 9월 5일 제121회 참의원 외무위원회

○ 시기: 1991년 9월 5일(목) 오후 1시 개회

○ 발언자:

- 덴 히데오(田英夫) 의원(저널리스트, 정치가, JNN 소속 언론인, 일본사회당 및 신자유클럽·민주연합 및 사회민주당 등 소속 참의원 의원, 사회민주연합 대표)
- 다니노 사쿠타로(谷野作太郎) 정부위원(외교관, 외무성 아시아국장, 내각관방 내각외정심의실장, 주 인도 대사, 주 중국 대사)
- 오타카 요시코(大鷹淑子) 위원장(배우, 가수, 참의원 의원)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2113968X00219910905&spkNum=35¤t=22>

○ 해제(개요 및 특징)

덴 의원은 북한이 강제연행된 종군위안부에게 개별적 배상 형식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일본정부가 저금통장과 같은 구체적 증거자료를 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고 질문하면서, 이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처사가 아니냐고 질타함. 정부위원은 개별적 청구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인정이 우선임을 강조함.

○ 주요 내용 번역

- ▷ 덴 “(전략)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북조선 측은 인적·물적 피해, 예를 들어 강제연행을 당한 사람 혹은 **종군위안부**라는 형태로 큰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대해 배상 형식으로 지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섭의 장(場)에서 일본 측은, ‘그렇다면 증거를 대라, 예컨대 우편저금통장이라든가 연금증서라든가, 그리고 정용에서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데 대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내라’고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 ▷ 다니노 정부위원 “북조선 측의 주장은 이른바 일본 통치시대의 인적 피해 혹은 물적 손해를 배상이라는 형식으로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은 조금 전에 조약국장이 말씀드렸습시다만, 어찌 됐든 그러한 개별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로서도 객관적인 사실을 먼저 분명히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장부를 제시하라고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런 구체적인 표현은 아니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정부에 보여 달라는 논의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신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포함해 제4회차에서 차차 그런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 **텐** “이에 대해 북조선 측의 전인철(田仁徹) 단장도 매우 화를 내며 피도 눈물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50년이나 지나서 그런 저금통장 같은 걸 가지고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 또 강제연행이나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런 저금을 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이 아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이걸 좀 피도 눈물도 없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강제연행 문제입니다만, 노태우 대통령도 지난해 일본에 오셨을 때 이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일본 측이 조사하고자 해도 솔직히 말해, 후생성, 노동성 등에서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서 전혀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노력으로 약간의 명부가 나온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라는 점에서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 문제로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비단 북조선만이 아니라 중국,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른바 일본정부의 태만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위원장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부디 이사회에서 외무위원회에 강제연행문제조사 소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다시금 참의원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 바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 **오타카 위원장** “알겠습니다.”